

## 남북간 상생 공영의 밑거름을 마련해야

정세현 /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 통일경제 100호 발간을 축하하며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통일경제」 100호 발간을 축하한다. 「통일경제」는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나 학자들에게 학술 차원의 자료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통일 문제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2010년은 국토 분단 65년, 민족 분단 60년이 되는 해지만,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통일경제」라는 제호 자체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통일경제」가 창간된 1995년은 남북한의 관계가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는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을 시작할 시점이다.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인도적 대북 지원이 결국 남북경협을 이끌어냈고, 남북경협의 흐름을 타고 다시 남북 당국간 정치적 대화도 열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에 「통일경제」라는 잡지가 창간된 것은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통일경제」가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도 했지만, 남북간 경제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동함으로써 남북간 정치적 신뢰 구축을 가능케 했고, 그것이 다시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지도록 물고름 트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는 상황에서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도 사실상 중단되어 있고, 남북 당국 차원의 관계도 완전히 「통일경제」가 창간되기 이전 시기로 역류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을 따지려 들면 끝이 없겠지만, 인류 역사의 전개 방향으로 보나, 민족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 보나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이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 정부에서는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조정기'라는 식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만, 그것은 상황 악화에 대한 책임 회피일 뿐이다.

## 2010년은 6. 25 60주년, 6. 15 10주년이 되는 해

금년은 6.25 60주년이며, 동시에 6.15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는 까마득한 옛 일처럼 되어가는 반면, 반목과 대결의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다. 10년 밖에 안된 6.15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고, 60년이 된 6.25는 갱소년(更少年)하는 것 같다. 6.25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Peace Keeping은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6.25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6.25 당시나 직후의 분위기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수 세력이 국내 정치적으로 일시적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남북간 반목 대결 분위기는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 Peace Keeping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경제가 커졌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 요소를 슬기롭게 활용해야 경제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15는 6.25 이후 50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Peace Keeping과 함께 Peace Making도 같이 해야 한다는 철학의 소산이었다. '북한에 대한 낭만적 환상의 소산'도 아니고 생각 없이 '퍼주기'나 하자는 것도 아니었다.

최근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IMF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어 매우 다행이지만, 남북간 경색 국면을 계속 방치할 경우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는 시간 문제로 될 것이다. 분단 국가에서 안보 위기 지수가 높아지면 신용 등급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6.25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6.15의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다. '7-4-7 공약(성장률 7%, 1인당 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 정부는 6.25가 아닌 6.15 정신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더욱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북한의 변화를 보는 두 가지 관점 : 입구론적 관점과 출구론적 관점

보수 정권에서는 지난 10년을 비판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대내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는 굉장히 컸다. 이러한 변화 움직임은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즈, 파이낸셜타임즈 같은 영미 언론들도 2003년부터 자주 보도해왔고, 이들 언론은 북한의 대내적 경제·사회적 변화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었다. 예컨대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나가려 하는 것 같다”고 평가도 했었고 “북한의 먼지 더미 속에서 자본주의의 싹이 올라오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었다. 다만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 체제나 대외 전략, 특히 대남 전략 면에서는 아직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 논할 때, 북한의 정치 체제 변화, 대남 전략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한 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경제 부문부터 시작이 되고, 경제 부문의 변화가 사회·문화 부문의 변화를 자극하고 정치·군사 부문의 변화까지도 견인하는 순서를 밟아왔다. 사회주의 체제는 특히 그렇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경제·사회적 변화를 통해, 변화의 초입 단계에는 진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입구로 들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보수적인 대북관을 가진 분들은 출구론적 관점에서 북한 변화를 논의하니까 북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0년의 대북 정책을 일괄해서 부정하는 우도 범하게 되었다.

지난 10년의 변화도 사실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 인도적 지원과 민간 차원의 소규모 경협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995년에 시작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도 그 이전에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 화해 협력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6.15 이후 본격화된 북한의 변화가 단순하게 6.15 선언 때문에 시작되었다기보다는 6.15 이전에, 초보적이지만, 그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외적 환경을 만들어놓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소 비판의 여지가 있다. 변화의 여지를 키워나갈 수 있고 가속화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차원에서 취한 조치들이 결국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중단시켰고, 북한의 정치 변화도 지연시켰으며, 군사를 포함한 대남 전략의 변화 여지도 그만

큼 줄어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싹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꽃도 피게 되어 있었는데,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꽃이 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싹을 잘라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해야

북한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역시 1998년 11월 18일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 때문에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만,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 사회가 남북 경제 교류·협력의 틀 속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남북간 정상회담까지 가능할 정도의 관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동서로 놓여있는 DMZ를 가로질러 남북을 연결한 서쪽의 경의선과 동쪽의 동해선, 즉 Peace Express Way(2004.10.26,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이 명명)을 통해 하루 수백 대의 차량이 남북을 왕래하였다. 동쪽 동해선 도로를 통해서는 연간 최대 35만 명, 총 195만 6천명명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고, 서쪽 경의선 도로와 서해 항공로를 통해서는 개성과 평양에 연간 10만 명 이상이 왕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촉진하였던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경제·사회 변화를 통해 정치·군사적 변화 및 대남 전략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촉진시킴으로써 남북이 서로 Win-Win하는 시대를 열고, 이를 토대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물론, 사회·문화공동체, 정치·군사공동체까지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선도적으로 닦아 나가는 사업이었다. 이러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장기 중단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남북간에 연결된 철도·도로가 다시 잡초 속에 묻히게 하는 것은 실용적인 정책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비핵·개방·3000 기조 때문에 先 비핵화, 先 개방을 요구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지시킨다면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6자회담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지난 10년간 북한에서 일어났던 경제·사회적 변화를 재개시키고, 남북간 상생 공영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북 정책 기조와 노선을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에 연결된 Peace Express Way를 다시 복원해야 할 것이다.